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한·미 첨단산업협력 구체화

상공자원부는 김철수장관이 지난 4월 방미 시 미국에 제시한 한미산업기술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미국의 고도기술과 한국의 제조기술을 접목시킨 합작생산 등을 통해 제3국에의 공동진출과 대일수입감소 및 수출촉진을 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양국간 업종별 협의회를 연내에 구성하고 주요국책연구개발에 양국 업계의 공동참여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을 조성, 중소기업의 한미기술이전 촉진과 합작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첨단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키 위해 첨단산업 투자자유무역지역(FIZ)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자유무역지역법(가칭)'의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상공부는 6일하오 박운서 제1차관보주재로 산업연구원·산업기술정보원·무공·업종별 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한미산업기술협력확대방안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말까지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하여 상공부·무역협회·산업연구원·무공·중진공관계자들로 작업전담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상공부가 마련한 한미산업기술협력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반도체·컴퓨터·항공기·자동차·환경설비·통신기기·의료기기

등 첨단산업에 대한 한미간 기술협력과 합작투자를 증진키 위해 해당분야의 한미협회간 업종별협의회를 연내에 구성, 운영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통해 업종간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으로 주요 국책연구개발에 한미업계의 공동참여를 촉진하며 미국선진기술의 상품화 및 합작생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대미구매사절단도 업종별 투자·기술협력단으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를 촉진키 위해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의 정책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진공의 시카고사무실을 기술이전과 투자전담창구로 보강하고 중진공과 미국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operation)간 중소기업의투자유치도 상호 추진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첨단기술의 대한기술이전을 촉진키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무공주관으로 제1차 한미첨단기술교류시장(테크노마트)을 개최키로 했다.

양국간 산업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무공과 미상무성의 해외상무국(FCS)과의 업무협약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협회 등 단체별로 미국업체나 협회간의 기술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전 EXPO 개최후 그 시설 및 단지를 기술 및 산업협력 공동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한미양국간의 첨단산업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 미국의 반도체 및 관련장비업체들의 대한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Applied Material사의 경우 최근 첨단 웨이퍼 가공설비의 조립생산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Lam Research사도 반도체 웨이퍼식 각장치의 생산을 위해 천안공단에 공장입주신청을 마치고 금년중 500만달러 규모의 증액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Motorola사는 25년전부터 반도체 조립사업을 해왔던 자회사인 한국 Motorola사를 첨단제품의 생산기지로 발전시키고 생산품목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1천만달러 규모의 증액투자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중국기업 대외교역 자율확대

중국정부의 개혁, 개방정책 시행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고객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개최된 '93년 봄 중국수출상품전시회에는 지난해 가을전시회보다 거의 2배이상 늘어난 2700여개 업체가 참여, 외국업체와 직접 구매상담을 벌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거래 관행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시회 개최본부의 총링키 대변인은 전시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내외업체들은 직접상담을 통해 고객확보에 나서고 수요업체들의 필요한 점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면서 올해 가을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시회에 참석한 외국업체들은 중국내 관련제품 공급업체의 가격수준을 비교, 가격인하 압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업체들은 이러한 요구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체결된 각종 상품의 계약 규모는 지난해 가을전시회의 계약규모와 비슷한 6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인 품목은 전자제품으로 흑백 및 칼라TV, 전자계산기, 라디오, 카세트레코더,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2백만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했다.

3. 미,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 불확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문제가 미 정부 및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홍콩주재 미 기업인들은 이에 대한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지난 천안문사태이후 가장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중국에 대한 MFN 연장 로비활동을 벌인 후 돌아온 홍콩주재 미 상의의 프랭크 마틴 회장은 현지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MFN 연장전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확실'이라고 밝혔다.

과거 부시대통령은 대중국 MFN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무조건적인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표를 모을 수 있는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중 부시의 독재적 전횡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MFN 부여분제를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들어서 있다.

마틴 회장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이후의 대중국 MFN 연장문제 로비는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하고 현재 정부와 의회로부터 나오는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콩주재 미상의를 이처럼 미 정부 및 의회

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클린턴 행정부가 아직 국내문제와 보스니아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MFN 연장여부 결정시한인 내달 3일이 다가오면 정부 및 의회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멕시코, 수입관리 강화

멕시코가 최근 반덤핑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새로이 요구하고 있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6일 무공 멕시코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의 각 세관들은 최근 대규모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중국산에 대해 지난 4월 1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수출국에 대해서는 중국산이 아니라는 확인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수입화물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이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산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통관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의 정부·수출업자·생산업자, 원산지의 정부가 인정한 조합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것이면 유효하지만 허위증명서가 아니라는 증명을 위해 반드시 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첨부가 요구되고 있다.

무공은 따라서 대멕시코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선적분에 대해서는 이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이전에 선적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해야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덤핑관세부과 조치이전에 선적한 중국산에 대해 일부 수입상들이 반덤핑관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상품에 대한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북미FTA 업계지원 요청

미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회승인 절차를 앞두고 협정안 통과를 위한 업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로이드 벤슨 재무장관과 로버트 루빈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은 의회관계자들이 NAFTA 시행으로 미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협정승인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가 대의회 로비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벤슨장관은 기업의 중남미진출을 협정체결 이전에도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NAFTA 시행으로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급증, 미국의 일자리수가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정시행에 따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은 멕시코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현지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역내교역 활성화는 미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벤슨장관은 밝혔다.

미행정부는 의회승인을 위한 업계의 지원요청과 함께 노동 및 환경문제에 관한 추가협정의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루빈의장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의회 승인 절차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등 협정 당사국들과 보조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보조협정이 체결될 경우 노동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의회

의 반대로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6. EC, HDTV 디지털방식 택할듯

EC는 고화질 TV(HDTV)전송기술의 독자적인 개발을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저널 오브 커머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EC가 지난 8년동안 총 750만달러를 투입, 아날로그 시스템의 독자적인 HDTV 전송기술을 개발해왔으나 이것으로는 미국의 디지털 방식을 따라잡을 수 없어 그동안의 개발노력을 완전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C 통신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EC 통신장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개발해온 아날로그 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디지털 전송방식을 EC 표준방식으로 채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틴 방게만 EC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EC는 HDTV 방송에 있어서 미국의 디지털 전송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시인, EC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종료를 사실상 확인했다.

EC의 독자적인 전송방식 개발 포기는 미국이 개발한 디지털 전송방식이 전세계 HDTV 방송의 표준시스템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고 있다.

7. 일, 반도체경기 본격 회복

NEC 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 각사가 수요 증가로 풀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던 일본 국내시장도 가전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일부품목은 품귀현상마저 일고 있다.

수급이 타이트한 것을 배경으로 출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일부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2년만에 일고 있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배경으로 주요 각사는 당초의 설비투자 계획을 확대 조정하기 시작했다.

NEC, 히다치제작소 등 일본의 반도체주요 각사는 메모리의 주력품종인 4메가 DRAM의 국내가격을 신규 수주분부터 4~7%인상할 예정으로 있다.

대미수출 급증에 따른 국내 수급압박을 계기로 가격인상을 단행, 채산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양산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지만 DRAM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국내의 4메가DRAM가격은 현재 개당 1300엔 전후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사는 50~100엔 정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메가DRAM은 퍼스털 컴퓨터용으로 국내의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일본내 하이비전 TV 등 AV(음향·영상)기기 관련 수요증가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NEC의 한간부는 "주요 각사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문의 80%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급격한 엔고의 진행으로 주요 각사는 국내 출하분과 함께 수출가격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주요 반도체5사의 '93년도 설비투자는 합계로 전년도비 3~6% 증가한 3390억~3490억엔이 될 전망이다. DRAM의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수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있어 하반기에는 확대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전년도 주요5사의 설비투자가 38% 대폭 감소한 것에 비하면 투자가 오래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반도체업계의 한관계자는 "민간설비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반도체업계의 투자 심리회복은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했다는 것

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주요제조장치의 하나인 스테퍼(축차 이동식 노광장치)의 최대업체인 니콘은 금년도에 전년도비 50% 증가한 판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일본반도체5사의 설비투자동향

(단위: 억엔)

업체명	'93전망	'92전망	'91전망
NEC	700~800	700	1,000
도시바	800	800	1,000
히다치	600~700	600	800
후지쓰	690	690	1,601
미쓰비시전기	500	500	900

8. 일본, 13조 2천억엔 규모의 신증합경 제대책 추진

1. 신경기대책의 내용(4.13일, 일 정부 경제 대책 각료회의 결정)

(단위: 10억엔)

사업내용	'93.4월 대책	'92.8월 대책	증 감
① 공공투자 (Public Investment for Social Infrastructure)	10,620	8,600	+2,020
○ 공공사업	4,170	4,450	-280
○ 교육, 사회복지투자	1,150	550	+600
○ 지방정부투자	3,500	2,800	+700
○ 공동주택투자	1,800	800	+1,000
② 공공 금융기관 용자 (lending by Gov't-affiliated Financial Institutions)	2,430	2,100	+ 330
○ 중소기업 대책	1,910	1,200	+710
○ 민간설비투자 촉진	520	900	-380
③ 투자세액 공제 (Investment Tax Credit)	178	13	+165
○ 고용조정 조성금	28	5	+ 23
○ 감 세	150	8	+142
계	13,228	10,723	+2,515

2. 기대효과

- 향후 1년간 명목 GNP 2.6% 증가(일정부 추정)
- 경기회복 촉진 및 내수진작으로 수입수요 증가
- 3. 우리의 활용대책
- 금번 일본의 대형경기대책 추진을 대일수출 증대의 호기로 활용, 분야별 적극적인 대책추진(업계 정보제공, 수출애로 파악, 해결책 강구 등)

사업부문별	사업규모	○ 아국 대일수출 증대 유망분야 및 기대효과
① 공공투자 확대 (도로, 교육설비, 주택, 사회복지시설, 지방정부사업 등)	10,620	○ 건설 및 건축관련 기자재 수입 수요 증가(철강재, 시멘트, 타일 등) ○ 공공투자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최종소비수요 증가(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① 중소기업 대책	1,910	○ 일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설비 개제용 중간재 부품
① 민간설비투자 촉진	698(세액공제 178 포함)	○ 철강, 기계, 전자 등 설비투자용 자본재
합 계	13,228	

금번 경기 대책 추진에 따른 수입 수요 증대 효과는 엔화 강세에 따른 대일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와의 상승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됨.

	1% 하락시	10% 하락시	20% 하락시
수 출	+0.264	+2.690	+5.411
수 입	+0.193	+1.930	+3.86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93. 3)